

도내 청년농 이자 부담 대폭 완화

전북자치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개정안 시행...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적용 기금출연 시·군, 청년농 대상 융자 조건 무이자로 변경 · 융자 대출 가능 금액 3000억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과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전북자치도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축수산물 산지 수매 및 저장 사업 △농·축·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 안정 사업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

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에게 무이자 융자 조건을 적용 등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1993년부터 운용된 전북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그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융자 한도와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기존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이율 2.0%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10억 원(기존 5억), 법인 30억 원(기존 20억)으로 지원 한도를 늘리고, 상환 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완화했다. 특히 청년농(만

45세 미만)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을 적용하여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됐다.

또한,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동안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농업 경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전북본

부와의 협약을 통해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해 농업인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기후변화 시대 대비 농업농촌 대응책 모색

농업농촌 기후위기 TF팀, 재해예방 · 환경친화적 식품산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나섰다. 기후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농업·농촌의 혁신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일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농업·농촌의 혁신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일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세미나에는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연구원, 한국국제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기후변화 인식 확산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권요안 의원은 TF의 조직 확대와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지난 7월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해 본청 6개 부서와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

인력개발원을 비롯한 협력기관 및 자원위원단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TF는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북연구원,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축산연구소 등이 각 분야 전문가로서 참여 중이다.

이 TF팀은 2022년부터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준비, 생산, 확대, 신산업이라는 네 단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부서장들이 직접 TF에 참여하여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및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TF가 선정한 핵심사업 분야로는 R&D, 생산적용, 탄소중립, 재해대책, 실천역량 강화, 참여확산, 환경친화 식품산업, 미래식량 및 첨단생물소재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이행점검을 통한 사업 간 연계 방안과 신규 사업발굴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최재우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변화와 재해 예방, 온실가스 감소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며, "전북자치도는 농축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TF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발 빠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액채납자 겨냥 '은닉재산 맞춤형 컨설팅' 본격화

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3개 시군서 3억5000만원 채권확보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14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채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권리분석, 가압류권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주, 순창, 고창군에서 진행된 컨설팅을 통해 약 3억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연초 실시한 시군 출장 결과를 통해 고액채납자 관리의 어려움과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인식, 지난 8월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액채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액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한다.

시군별로 추진된 고액채납자 맞춤형 컨설팅의 주요 사례로는 △미압류 부동산 및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제3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압류 △미상속 부동산 대위구기 촉구 △정산금 채권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이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10년 이상 등재된 저당권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과 납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진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기존에 정리보류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광역징수반을 구

상해 건설기계 압류,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고액채납자는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가택수색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632명에 대해 106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압류와 추심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준설토 투기장 수명 다하는 공백기간 동안 새만금 내측 준설토 투기 방법 찾아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24 - 군산항 준설토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항은 금강 하구 연 특성상 연간 약 300만㎡의 준설토가 발생하는데 방대한 양의 퇴적토는 수심을 얕게 해 상시 통항성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대형 선박이 군산항 입항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산항 물동량이 급감하게 돼 항만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고 국내 14개 항만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되었다면서 군산항 준설사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실시해 한 해 평균 100억 원의 예산으로 총 300만㎡ 중 100만㎡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계획으로 시행했으나, 최근 준설량은 그 절반인 50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며 투기장이 포

화상태여서 더 이상 투기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7부두 야적장 투기장은 3년 전부터 이용하지 않고 있고 1980년대에 조성된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은 72만㎡ 준설토를 투기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며 현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2028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2025년까지 현 투기장을 겨우겨우 활용하더라도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2025년이 되면 준설토 투기장이 없어 3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대형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10-13m의 수심은 확보해야 한다면서 준설로 겨우 10.5m를 유지하고 있는데, 준설을 중단하게 되면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된다며 군산항은 문을 닫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되었으나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도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기에 군산항의 미래가 달린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관계기관은 반성해야 하며 눈앞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현 상황에 대처할 방안으로 △투기장이 수명을 다하는 3년간의 공백기간 동안이라도 새만금 내측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효율적인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배 늘려 적어도 퇴적량의 2/3는 준

설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관계부처가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신속한 사업 진행 촉구를 건의하고,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물동량을 제대로 예측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정례회에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인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9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완주생강, 전통의 힘으로 미래를 연다

전북자치도, 농업유산 도농상생 행사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유산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협력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봉동읍 임거마을과 신기마을 일대에서 (사)지역활력센터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와 함께 '농업유산 도농상생 기업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과 계승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완주생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인과 전통 농법을 이어가는 공동경작인,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완주생강 농업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고 협력의 의미를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임거마을과 신기마을 일대에서 전통농법을 통해 재배되는 완주생강을 수확하고, 생강 재배의 전통을 이어온 공동경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한편, 생강빵과 생강청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신기마을의 생강굴 주막을 방문해 농업유산 지정 배경과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동읍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완주생강 관련 가공품을 직접 구매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전북자치도와 (사)지역활력센터는 농업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농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자산임을 알리며, 도농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양육비 지급 이행을 제고

민주 이원택 의원, 양육비 국가대지급 특별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한

정적이고 지원기간 역시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3년 기준 양육비 지급이행률은 42.8%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 부과,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설치(여성가족부 소속),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양육비국가대지급 실시,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국가대지급 실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 가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양육비는 한부모 가정 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그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며, "이번 제정안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24 한국 의료웰니스관광대전'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2024 한국 웰스·웰니스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페스티벌 첫날인 10월 30일 현지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관료개척 지원사업에 선정돼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한 3개 관광기업의 상품 피칭과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올해 1차 방한 대표단의 전북자치도 방문 추진 후, 다음해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병행·여행사 대상 전북도 치유·의료관광 캠퍼 투어 추진 등 본격적인 상품 판매를 위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10월 31일에는 자카르타의 고급 쇼핑몰 중 하나인 센트럴파크 몰에서



현지 중산층 이상 소비자를 겨냥해 B2C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 있는 도내 치유관광 거점지인 △진안 △임실 △순창 등을 중심으로 치유·의료관광 홍보와 소비자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11월 1일은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환) 최인실 사무국장과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 지원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선 기자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 모집

30명 모집... 28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 대표 공식 블로그와 함께할 기자단 30명을 모집한다.

도 블로그 기자단은 전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도 대표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blog.naver.com/jbg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선발된 기자단은 2025년 1년간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한 아이템 선정,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여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참여권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부여된다.

/이만호 기자